



도, ‘K-김 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전국 2위 수준 물김 생산

기반 바탕으로 종자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2030년 3000억 규모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2위 수준의 물김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종자·양식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이어지는 ‘K-김 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새만금 수산 식품단지를 거점으로 관련 사업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과 기업 지원을 병행해 2030년까지 도내 김 산업 규모를 3,000억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도는 현재 물김 생산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가공·수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구축과 가공 기반 확충 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2025년 기준 물김 생산량이 5만 802톤으로 전국 2위 수준이지만, 미분김과 조미김 가공시설이 부족해 상당량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되면서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보여 왔다.

도는 우선 김 양식 기반을 확대한다. 도내 양식 면적은 2024년 5,345ha에서 2026년 6,055ha로 늘어났으며, 타 지역의 의존도가 높은 종자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김 종자 배양장 조성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 체계도 마련한다. 새만금 수산 식품단지에는 해양수산부의 국비 350억원 규모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실증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 상용화와 연계한 육상 김 양식단지 조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공·유통 분야의 핵심 거점은 새



군산에 AI 데이터센터 세운다

문은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장, 박준영·이우성 (주)SGC에너지 대표이사)가 협약 체결하고 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주)SGC에너지(이우성 대표이사)와 총 8,72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MOU)식이 열린 가운데, 이원택 도지사, 김재준 군산시장, 문은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장, 박준영·이우성 (주)SGC에너지 대표이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만금 수산 식품단지다. 도는 1단계 사업에 623억원을 투입해 해수 인·배수 시설과 배출수 정화시설, 스마트 가공 종합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곳에는 김 가공 전문기업 6곳을 포함한 수산 식품 기업 11곳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인접한 4만평 부지의 관리 전환이 완료되면서 단지를 총 8만평 규모로 확대할 기반도 마련됐다. 도는 추가 부지에 김을 비롯한 수산식품 기업을 유치해 기업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군산군도 일원의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도 추진된다. 지정이 이뤄지면 친환경 물김 관리선과 가공용수 정수 시설, 폐수 저감시설 등 생산부터 가

공·수출까지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또 2028년부터는 생산자와 가공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마른 김 거래소를 구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통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 성장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내년 20억원 규모의 새싹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상품화, 브랜딩, 판촉을 지원하고, 2027년부터는 새만금 수산 식품단지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과 가공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스마트 양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수산 식품 가공·저장처리업을 지역

특성화 업종에 포함시켜 투자기업이 설비투자 보조금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물김 생산액 700억원, 김 가공 매출액 1,100억원, 김 수출액 1,2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의 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에서 생산한 김이 도내에서 가공·유통돼 세계시장으로 수출되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북을 대한민국 김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진안·무주 등 7개 군에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

7개 군,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 진안, 31일부터·무주, 내달 10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

가 선정된 7개 군에서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지역 사정상품권으로 첫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

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경상북도 청송 등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원이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 적용해 이달 말 2개월분을 받는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소비가 쏠리는 것을 막고 번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군이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급 후 3개월 이내이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다.

진안군은 31일부터 첫 지급한다.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뉴시스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지역주재기자(김제)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접수기간 2026년 8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급… 광역 최초

723명에 1인당 연 120만원… 11~12월 지급 예정

전북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참여자 유족 723명(2026년 7월 기준)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 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절차는 25일 지급계획 공고로 첫발을 댄다. 신청·접수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된다.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 선정과 통지를 마치는 대로 11~12월 중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549명분을 우선 반영한 데 이어, 지난날 추경을 통해 대상 인원을 723명으로 늘렸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상징성을 지닌 전북이 참여자 후손 예우에 먼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에 맞서 국권을 지키고자 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이후 항일야병운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항일의병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것과 달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행 보호체계에 따른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수당 지급은 이러한 예우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먼저 메우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미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수당 지급과 함께 정신 계승 사업과 역사문화거점 조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